e-행복한통일 웹진만 봐도 통일전문가!

webzine.nuac.go.kr

웹진 〈e-행복한통일〉과 모바일 〈통일시대〉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본다!

통일지식, 웹진 보며 관리하세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쓰는 통일 정책 칼럼,
통일과 탈북민 정착을 위해 일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북한에 부는 한류이야기, 북한말 웹툰, 북한요리 등 볼거리 가득~!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보세요!

Play Store에서
〈민주평통웹진〉검색

민주평통웹진

민주평통 웹진 e-행복한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
설치된 항목

설치

스마트폰에서
〈민주평통웹진〉
아이콘 클릭

통일시대

2016년 11월 Vol.121

COVER STORY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 전망

일본인 학자의 특별기고
북핵 위기에 대한 한·미·일 경계 강화 방안

배급제 붕괴가 불러온 북한 물류혁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일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연설

CONTENTS

2016년 11월 VOL.121

06

10

32

48

62

02 **이달의 메시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6 **커버스토리**
北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이 효과적일 수도

10 **이슈**
북한은 유엔 회원국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
안보리 결의안에는 저항하며 대북 지원은 호소

14 **특별기고**
북한 핵 위기에 대한 한·미·일 연계 강화
왜 3국은 협력해야 하는가

16 **포커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
목전에 있는 '통일 강' 건너기 위해 일본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20 **진단**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
정밀 타격으로 北 지휘부 무력화 '공격적 방어'로 북핵·미사일 대응

24 **분석**
북 수해와 긴급구호,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
핵 개발은 한없이 밉지만, 주민 고통은 가슴을 저민다

28 **북한IN**
북한의 물류와 시장
운송업자·주유소 등장… 평양도 '택배'가 가능해졌다

32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 휴전선은 언제 열릴까
합의에 기반한 통합능력·포용력이 통일 가능케 해

36 **인터뷰**
한삼화 경북지역회의 부의장
삼국통일의 후예가 남북통일도 이끈다

38 **해외지역회의**
사는 곳은 달라도 조국 통일은 한마음
"울면서 나간 여러분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44 **인터뷰**
송창근 아세안 부의장
조경행 중동협의회 이집트지회장
이혜경 베트남협의회 자문위원
권영관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

48 **뉴스 & 민주평통**
- 2016년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 열려
-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 부산 서구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 강원 태백시협의회, 샌프란시스코협의회

60 **협의회 탐방**
경기 양주시협의회
양주의 통일 운동은 서남아로 뻗어간다

62 **통일 문화유산**
고창·화순·강화 청동기 고인돌 답사 여행
청동기 시대 속으로

66 **통일 칼럼**
우리도 비대칭으로 가자

표지 이야기
상주시협의회는 상주이야기 축제에서 '아이러브 대한민국 꿈이 있는 통일 홍보관'을 운영했다.

통권 제11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진하, 박인휘, 이희옥, 조봉현, 최우선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한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北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이 효과적일 수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지만 미·중관계 경색으로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엔 한계가 있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정보 폭탄' 투여가 정답에 가깝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 결의안은 위력을 잃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통령실·민주평통·국방부·통일부 자문위원 역임. 현재 육군 정책자문위원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10월 15일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들어 11번째의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헌장 제41조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엔헌장 제41조는 철도, 항공, 전신 등 교통과 통신수단의 차단 및 외교관계의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해외 자산의 동결, 북한산 금·석탄·희토류 등의 수입 금지, 북한 통항 항공기의 검문 및 통행 제한 등 '물자와 돈'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했지만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전통적으로 입술과 이의 관계 즉, 순치관계(脣齒關係)라고 불려왔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脣亡齒寒·순망치한) 북한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 대결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38선을 수호하려는 결단 또는 미국의 전술적 책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추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한 바 있다.

마오쩌둥은 북한이 무너지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 확장으로 중국 공산당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는 계산에 근거해서 참전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 제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민생 보호 등 '인도적 예외' 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북한의 대중 섬유 수출은 7억4100만 달러에 이르지만 '민생품목'으로 인정돼 제재에서 제외됐다.

미 하원, 인질 몸값 지불 금지법 결의

북한이 수출하는 섬유제품들은 대부분 군과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북한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산 철광석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한 해 약 4000만~5000만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과 은밀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도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5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이며, 이들이 연간 약 23억 달러(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송

출 노동자의 수가 11만~12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들이 연간 약 50억 달러(약 5조 원) 이상의 외화를 김정은에게 보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금지와 중국인의 북한 관광 제한,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해 현금, 수표 및 귀금속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안(H.R. 5931)'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북한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또한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 수송을 도맡고 있는 고려항공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북한을 전 세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하기 위해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돈세탁을 돕고 핵 개발에 필수적인 산화알루미늄 등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 단둥의 중견기업 홍샹(鴻祥)그룹을 제재했다. 미국이 제3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조치로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는 홍샹그룹처럼 북한을 대신해 돈세탁을 하고 제재 물품을 은밀히 거래하는 기업이 수십여 개 있다고 한다.

대북 선제 타격론과 핵 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이 현실적인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도 모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중국은 "어떤 나라도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의무화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이 미국과 거래하려면 북한과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동북3성의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입 및 중국산 원유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적 요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당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함께 베이징에서 라오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기내에서 6시간을 같이했고, 비엔티안에서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RF에서 북·중 외무장관 회담은 북·중 친선과 관계 발전을 강조한 반면, 한중 양자회담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5차 핵실험을 북한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실험"이라고 하면서 "핵탄두가 표준화·규격화"되었고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제 북한이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등 다양한 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북한은 한미 정보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 3년 내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면을 동봉한 대북 전단을 띄우는 탈북자단체. 북한에 올바른 정보를 집어넣는 노력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무너뜨리는 한 방법이다.

외부 정보 유입시켜 북한 변화 유도해야

임기 말년의 오바마 정부와 미국의 대선 정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마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힘을 잃고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포착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6~8차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싱크탱크가 거론하고 있는 핵시설 및 저장소, 미사일 발사대, 핵실험장 등에 대한 선제 타격과 경제적 보상에 의한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 또는 김정은 정권의 변환과 체제 전환 등이 아니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미국과 중국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과 핵 협상을 요구한 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또는 워싱턴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볼모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한 뒤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론과 우리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 무장론 및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비효율적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도 모른다. NUAC

유엔본부에 조기로 내걸린 유엔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유엔본부는 조기를 걸었다. 유엔과 김정일은 악연인가, 선연인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

안보리 결의안에는 저항하며 대북 지원은 호소

북한은 6·25전쟁을 치르며 유엔과 악연을 맺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후에는 지원은 받아내면서 규제에는 맞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임무도 배반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월 22일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 등으로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이미 다른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됨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2년 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반대해 북한과 단교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공화국 대표도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도 않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유지 여부가 제기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일련의 행동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에 부수되는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참혹한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바람 속에 1945년 탄생한 유엔은 헌장(제4조)에서 모든 회원국은 '평화애호국가(Peace-loving State)'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왜 우리는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을 했는가

유엔 회원국은 유엔의 기본정신(헌장 전문)과 목적(헌장 제1조)인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인권의 보호와 신장, 국가 간 평화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특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와 같은 원칙(제2조)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 헌장과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위협하고 있어 유엔 회원국의 기본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북한과 유엔은 오래전부터 악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1948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민주선거의 실시를 거부한 바 있다. 1950년엔 6·25전쟁을 도발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즉각 침략자로 규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6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6·25전쟁에 참가했다.

유엔의 강력한 군사 제재로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격퇴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여전히 유엔군 및 유엔사령부와 대결하는 형국으로 남아 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된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이 공세적인 북방외교를 펼쳐 한국의 유엔 가입이 기정사실화되자, 북한도 서둘러 유엔 가입을 희망해 동시 가입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한국과 국제사회는 유엔 회원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북한이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맞추어 '정상국가'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박홍순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 남캐롤라이나대 국제정치학 박사. 현재 한국유엔체제학회장, 선문대 대학원장,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충남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저서 〈국제기구론〉, 〈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등

하지만 북한은 회원국의 의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유엔 헌장과 유엔의 역할에 반하는 행태를 취해왔다. 올해 가입 25주년이 되었지만 북한은 유엔의 '말썽꾸러기 국가'라는 불명예를 쌓아가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 도발과 인권유린 등으로 유엔 헌장과 유엔 결의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1993년 핵 개발 시도가 발각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사항인 사찰을 거부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6자회담, 양자회담 등 대부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 등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을 반복했다.

2006년 최초로 핵실험을 한 이래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과 20여 차례 이상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하며 노골적으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2270호 등 안보리가 헌장 제7장(41조)에 따라 부과한 상당한 수준의 포괄적 경제 제재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비난하고 한국, 일본, 미국을 향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도 문제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유엔 헌장과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2003년 유엔의 구 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현 인권이사회도 매년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제약, 탈북 송환자 처벌, 강제 납치자,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총회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권유린 상황에 책임 있는 북한 지도층 인사들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반인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처벌하라는 것이다.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식 인권'을 내세우며 그동안 제기돼온 지적 사항을 대부분 부인하고 인권 거론이 북한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엔을 비난하면서도 탈퇴는 하지 않는다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러한 위반과 도발적 행태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 그렇다면 헌장이 규정(제5조 및 6조)한 대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은 정지되거나 제명(축출)될 수도 있는 것인가?

국제정치의 현실상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회원국 가입과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나 퇴출에도 안보리의 권고(동의)와 총회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안보리 구도하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동정적인지라, 그 실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북한의 회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정치외교적 경고이며 압력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의 제재나 규탄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유엔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지만, 결코 유엔 탈퇴를 언급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있다. 식량난이나 가뭄, 수해 등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유엔 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유엔이나 유엔 활동에 대해 부인하거나 반박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유엔은 '양날의 검'과 같다. 북한은 유엔 활동과 유용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9월 22일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연설을 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의 규탄과 제재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아온 것이다. 북한은 식량난이나 가뭄, 수해 등 자연재해나 인도적 혹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유엔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더불어 다양한 구호와 지원, 그리고 개별협력사업 등을 전개해왔다. 지난번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 사태 후에도 북한은 유엔 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는 유엔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나 유엔의 비판에 대하여 변명하고 적극 활용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유엔의 제재나 규탄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유엔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싸잡아 비난하지만, 결코 유엔 탈퇴를 언급하거나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유엔 통한 다자 제재도 반복되면 위력 발휘

북한은 제재에 강경히 맞설 뿐만 아니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유엔의 구호 활동을 간절히 요청하거나 유엔을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불량회원국' 행태는 같은 기간 한국이 유엔의 중추적 회원국으로서 발전하고 기여해온 것과 대조된다.

그동안 국제 분쟁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유엔 자체의 정치적인 제약과 제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실행 방안의 결함 등으로 인해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270호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의 다자 제재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회가 일정한 기간과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가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유엔은 그동안의 제재에서 드러난 '구멍'을 막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해 처음으로 유엔군을 만들었다. 그러한 유엔에 들어온 북한은 유엔에 저항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 푼이라도 지원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DMZ 초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유엔사령부기(2010년 촬영).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다. 대북 제재의 목표는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압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될 것이다.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나 위협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에 중국마저도 북한을 옹호하거나 방패막이를 하는 명분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은 핵 개발 같은 무모한 시도를 해 더 이상 평화를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이나 유엔 회원국들의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유엔을 두려워하거나 유엔이 갖고 있는 엄격한 경제적 혹은 군사적 권한이나 도덕적 권위에 맞서기보다는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 구현자, 개발 지원자, 인권 수호자에 협력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한국과 협력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NUAC

북한 핵 위기에 대한 한·미·일 연계 강화

왜 3국은 협력해야 하는가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라는 공격과 정보 공유라는 방어체제를 조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해야 한다.

2015년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난 미(애슈턴 카터)·일(나카타니 겐)·한(한민구) 국방장관.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면 3국의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은 1월 6일의 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5차 핵실험의 위력은 TNT 폭약 10킬로톤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가까운 것이었다(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폭발 규모는 22킬로톤 정도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으로 순식간에 파괴됐다. 그해 말까지 히로시마에서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목숨을 건진 피폭자의 대부분도 후유증(원폭증)에 시달렸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이 10킬로톤의 핵무기를 서울에 투하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이상이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10년 이상 10%씩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핵탄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확실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한·미·일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 들어서 그 속도를 가속화해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 괌까지 도달 가능한 무수단, 그리고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실험을 8개월간 21차례나 실시했다.

징벌적 억제만으로는 불가능

실패를 거듭한 끝에 무수단과 북극성 미사일의 실험은 일부 성공도 거뒀다. 5차 핵실험 직전 동해로 발사한 3발의 스커드-ER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겹쳐지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핵미사일에 대한 양적, 질적 강화를 고집하고 있어 한·미·일은 공조를 통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며, 실패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통한 징벌적인 억제'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능력(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액션으로 계속 핵 능력을 보유한다면, 3국이 가진 이 징벌적인 억제 능력만으로도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력 강화는 김정은 정권의 전복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이나 선제공격 감행 등으로 악영향이 더 커지는 '안보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국제관계론에서의 안보 딜레마 회피는 적성국에 대한 압력 강화보다 안전보장 등 안심공여(Reassurance)를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움직임에 대한 오해나 오인, 내부 붕괴로 인한 정권 종식으로 자포자기식 핵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내세워 한반도 통일, 혹은 다른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세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3국 협력으로 방어 능력 제고를

한·미·일 3국은 북한에 핵미사일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해야 한다. 억제 실패 시 공격에 대한 확실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거부적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성 요소에는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지휘명령 계통 등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핵미사일의 사용 전에 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공세적인 수단 등이 있다.

미국은 냉전 이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적대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 유도무기 등의 능력을 강화해왔다. 한국도 킬 체인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을 은닉하고 이동식 탄도미사일과 SLBM까지 개발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이라, 그것을 사용 전에 완벽히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도 그 피해가 극한에 미치지 못하도록 한정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탄도미사일방어(BMD)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에 이지스 BMD를 구축하고 신형 요격미사일(SM-3 블록 2A)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BMD 능력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준비하는 동시에 2016년 7월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합의했다. 사드 배치는 거부적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BMD도 100%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라는 두 능력을 조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거부적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3국 각각의 능력 향상과 긴밀한 연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공격은, 타국 영역에 공격을 할 수단이 없는 일본이 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BMD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추적, 요격까지 3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요격 확률도 높일 수 있다.

BMD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로, 이를 동맹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동맹국과의 코미트먼트(Commitment, 확약)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3국의 거부적 억제태세 정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과 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 협력을 보장하게 되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정보 교환 능력 제고를 위해 한·미·일이 처음 실시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 '퍼시픽 드래곤 2016'은 BMD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었다. 사드 도입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3국 방위 협력의 에너지가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에 있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간 방위 협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NUAC

도사키 히로후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주임연구원
일본국제정치학회, 국제안전보장학회, 일본군축학회 회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

목전에 있는 '통일 강' 건너기 위해 일본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북한발 군사 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가능성을 넓혀가야 한다.

한일 해군이 벌이는 방재 및 구조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일 양국이 취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일본 도쿄대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 방문학자,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 역임. 〈제3의 일본〉(2008),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2014),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근간) 등 저서와 논문 다수

북한발 군사 위협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의 운반 수단이 될 미사일 개발과 발사 실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들어 스커드와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20여 차례 실시했다.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8월에 발사된 노동 미사일과 SLBM은 각각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방공식별구역(JADIZ)에 낙하해 일본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향후 북한 정권은 미사일의 소형화, 경량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도발, 배합전에서 핵 선제타격전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무기화에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 군사제도와 군사 전략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군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군 지휘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 핵 전력 및 미사일 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의 위상이 기존 육해공군에 맞먹는 형태로 급상승하고 있다.

1999년 미사일교도대로 창설된 이 부대는 2012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칭되더니, 2014년을 전후해 전략사령부로 재개명되었다. 그 사령관인 김낙겸 상장은 대장으로 승진해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동행하는 등 군내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전력의 증강과 관할부대의 위상 상승은 북한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북한 외상 이수용은 국제회의에서 핵 선제타격을 운위한 바 있고, 올해 3월 북한 국방위원회와 김정은은 "핵 선제타격전을 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핵 능력 증강에 기초하여 공격적 핵 전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북한발 군사 동향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북 대응태세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핵 전력 증강에 바탕을 둔 북한의 공세적 전략 개념 표명은 우리의 국방태세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변화된 능력과 의도에 기초하여 대북 군사적 대응태세를 조정해야 한다.

대북 군사적 대응의 방향은 한국 자체적인 군사 능력의 증강, 한미동맹 차원의 핵우산 신뢰성 강화와 전략타격 능력의 강화, 그리고 주변 우방과의 안보 협력 증진 등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무기체계 배치와 이를 관할하는 가칭 전략타격사령부 창설과 같은 지휘체제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방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해 있는 우리의 처지에

나카타니 겐(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8월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그는 노동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루스벨트는
"험난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악한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전시 군사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구소련처럼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나라가 아니다.
역사 인식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는 공유하고 있다.

비추면 실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인 방안은 한미동맹하에서 핵우산 및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미 연합작전 태세하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징후가 있을 시 이를 전략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나 미 태평양사령부, 미국의 핵 전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발 군사 위협을 함께 받고 있는 우방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발 군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국과도 동맹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는 부족

한국과 일본은 역사 인식이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 때문에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해왔다. 한국에서는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안보 정책들을 군사대국화의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강하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 성사 직전으로 갔던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 직전 단계에서 국내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발 군사 위협이 가중되는 현실을 앞두고, 역사적 감정에 얽매여 후방에 위치한 일본과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안보 전략이 아니다.

얄타에서 처칠 영국 총리(왼쪽), 스탈린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과 함께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험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악한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구소련과 연합을 했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가 일련의 안보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금기시돼왔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10여 개의 안보 법제를 제·개정하고, 미·일동맹 차원에서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 강화와 일본판 해병대의 창설을 주도하고, 정보 수집 및 분석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개헌 추진을 통해 헌법상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위대를 가칭 '국방군'으로 재정립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이를 활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의 주요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미국의 확장억제 및 핵우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미·일 협력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대북 억제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인간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일본은 자체 정찰위성 운용을 통한 대북 화상정보 및 음성정보 분석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9월 라오스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양국이 불편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됐다는 암시가 된다.

루스벨트는 왜 구소련과 연합을 했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된 이후 2013년 12월에 한·미·일 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긴 했다. 그러나 미국을 경유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으로는 제약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일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 협의 및 관련 협정을 활발하게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발 군사 위협이 가시화될 때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과 괌에 전개된 미군 전력이 한반도로 증원된다. 그때 일본은 미·일동맹에 따라 후방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일본 내 기지를 미국 이외의 우방국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게 됐다. 유사 시 미군의 증원을 원활히 보장받고, 한미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험난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악한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공산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전시 군사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구소련처럼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나라가 아니다. 역사 인식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는 공유하고 있다.

북한발 군사 위협이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가능성을 넓혀가야 한다. 조국 통일의 목전에 있는 험난한 강을 넘기 위해 일본이 내밀고 있는 손을 잡아야 한다. NUAC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

정밀 타격으로 北 지휘부 무력화 '공격적 방어'로 북핵·미사일 대응

신형 정보자산과 함께하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은 적에게 공포감을 줘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개념이다. 행동을 하면 적의 민감 부위를 초전에 궤멸시킨다.

킬체인과 KMPR 작전의 주역이 될 F-35 스텔스 전투기.

|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군 당국이 '평양 초토화' 작전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월 9일 합동참모본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공개했다. 3K(Kill Chain, KAMD, KMPR)를 밝힌 것인데,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은 제3축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었다.

제1축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이다. 선제 타격의 개념을 담고 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제이다. 군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들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이 작전들을 수행하게 될 'K2 작전수행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대량 파괴하는 복수전략을 의미한다. KMPR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본격화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1월 6일 이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뒤 점점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적 억제'에 비중을 둔 킬 체인이나 KAMD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 억제' 방안이 마련돼야 했다.

임호영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KMPR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특수작전부대 등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제거작전인 '참수작전(Decapitation)'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심화된 것이다.

KMPR은 뇌에 충격 줘 몸 전체 마비시키는 전략

KMPR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약점을 활용한 작전이다. 독재국가는 지휘부가 무력화되면 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전쟁 수행 의지와 체계가 마비되는 경향이 있다. 뇌가 손상되면 전신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KMPR은 뇌에 타격을 줘 몸 전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이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10월 12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마 그(김정은)는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즉시 죽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을 지목해 언급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

KMPR을 위해 군은 타격 목표를 김 위원장과 핵·미사일 전력을 총괄하는 김낙겸 전략사령관을 포함한 북한 지휘부와 평양 핵심시설로 잡았다. 김정은과 이들은 이미 군이 평시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기(旣)계획된 표적들이자 긴급 표적인 '시한성 표적(TST·Time Sensitive Target)'이다. 특별한 주의와 절차가 요구되는 '민감표적(Sensitive Target)'이기도 하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뼈아픈 보복을 성공시키려면 이 표적들을 정확하게 파괴해야 한다. '정확한 파괴'는 '정확한 표적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확한 표적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해야 한다. 정밀 타격능력은 정보·감시·정찰능력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다. 정찰·감시·정찰자산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하고 확인·추적하느냐에 따라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이 좌우된다. 김정은의 동선은 핵심 관건이다.

참수작전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큰 육군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대. 참수작전 수행부대로 지정되면 기존의 대테러작전은 물론이고 침투작전도 병행해서 연습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은 정찰·감시장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자산으로는 북한군 수뇌부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에는 제한이 많다. 영상정보 자산으로 RKF-16정찰기와 금강정찰기, 중고도 무인기 헤론-II, RQ-101 송골매, 아리랑-2호·3호·3A호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 처리가 가능한 전구(戰區)급 정찰자산은 금강이나 헤론-II에 불과하다. 이에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4대를 2018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정찰위성 5기를 2022년까지 확보하는 '425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적 억제'에 비중을 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호정보자산도 보강된다. 군이 보유한 RC-800 백두정찰기가 고도 1만3000m까지 상승해 백두산까지 통신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찰 거리와 체공시간이 짧고 기체가 작아 무장 능력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팰콘-2000 항공기를 기반으로 개조된 신형 백두정찰기를 2017년 도입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는 물론 계기정보까지 수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다발로 평양 핵심시설 구역별 타격

KMPR의 핵심인 정밀 타격은 구역별로 할당된 평양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공군은 야간 전천후 정밀 폭격이 가능한 F-15K 슬램이글과 KF-16C/D가 지하관통력이 뛰어난 GBU-28 벙커버스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슬램-ER,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타우러스-KEPD-50을 장착하고 타격에 나선다. 슬램-ER는 278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나 돼 대전쯤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주요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오차 범위가 1m에 불과하고 특정 건물의 유리창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지니고 있다. 타우러스는 170여 발이 도입돼 올해부터 전력화되지만 추가로 90여 발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F-4와 F-5도 활용 가능하다. F-4와 F-5는 위성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Korea GPS Guide Bomb)을 사용하면 100km 밖의 표적 타격이 가능하다. 대공미사일 공격용으로 생산된 자폭형 무인기 하피, 하피 II도 투입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 역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지스함에 장착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해성-2 순항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의 해성-3 순항미사일이 타격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0년쯤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도 활용된다.

육군 전력 역시 미사일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사거리 300km인 현무-2A와 사거리 500km인 현무-2B 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km가 넘는 순항미사일 현무-3 등이 총동원된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은 1000여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규모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육군은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도 조만간 전력화할 계획이며, 미사일 규모 또한 꾸준히 늘려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려 신속한 타격이 어렵다"며 "순항미사일보다는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5~10분 내에 북한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참수작전전담 특수부대'의 존재다. '한국판 레인저부대'로 불리는 이 부대는 1개 여단 규모로 특수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가 재편성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역할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적진에서 타격자산들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임무 특성상 고공 침투능력과 저격에 능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과 해군 특수전여단 예하 특임대가 이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간 대테러 임무가 주된 역할이어서 참수작전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김정은 제거 작전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슬람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참수작전을 전담해온 특수부대가 수년간 실전과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무게	탄두중량	비행속도	최저비행고도	유도방식	제작사
약 1.4t	약 480kg	음속의 약 0.95배	30~40m	군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성항법(INS)유도시스템 등 3중 유도	타우러스 시스템스

대구 상공서 북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KMPR을 수행하는 핵심 무기다.

대(對)테러에서 참수작전으로 이동

군은 특수전 전담부대를 위해 300억 원을 대테러 명목으로 편성해 소총 등 개인화기, 통신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시급한 것이 특수부대가 적 지휘부 제거작전 수행을 위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북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저공 비밀침투가 가능한 특수수송기와 헬기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에 신속하게 침투할 능력을 보유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을 기점으로 최대 660km, 대구공항을 기점으로 최대 800km까지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은 침투작전에 은밀 침투용 항공기인 MC-130 특수전 수송기와 MH-47 특수전 중형 헬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항공기들은 지형 추적 및 지형 회피 기능을 가진 사일런트 나이트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해 수십 미터의 저고도로 저공 침투 비행이 가능하다. 또 3세대 적외선(FLIR) 장비를 장착해 야간 악천후 침투능력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런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육군특전사령부는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밀 침투용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투수단과 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MC-130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침투수단을 갖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KMPR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KMPR은 공격을 받은 뒤 수행하는 전략으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응징전략의 목적이 응징 그 자체가 아니라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공격 의사를 억제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MPR은 좀 더 정교하게 구성돼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북한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이 KMPR의 본질이다. 위협이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이 '위협의 현실화'를 절감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량응징보복작전이 '말의 허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단호한 의지와 실제 가용한 능력을 구비한 '가공할 위협'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NUAC

북 수해와 긴급구호,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

핵 개발은 한없이 밉지만, 주민 고통은 가슴을 저민다

큰 수해를 당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주민은 돌보지 않고 핵 개발에만 몰두하는 김정은 독재 탓이다

2015년 4월 28일 복합비료, 온실 건설자재, 영농 기자재 등 농업 협력물자 컨테이너 22대 분량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건너는 에이스경암의 대북 지원 차량. 2010년 5·24 제재조치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던 민간단체의 이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 **김호준**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말이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 최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재난 상황을 비교적 신속히 국제사회에 알렸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9월 3일 "8월 29일 발생한 태풍 10호(라이언록)와 북서쪽에 형성된 저기압 마당이 합쳐지면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를 비롯해 조선의 전반적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며 태풍 피해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두만강 유역에 관측 이래 가장 큰물(홍수)이 발생해 강이 범람하면서 일부 지역이 혹심한 피해를 봤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으로 회령시에서만 15명이 행방불명됐으며, 함경북도 전체적으로는 8670여 동, 1만7180여 가구의 주택이 완전 또는 부분 파손되면서 4만40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북, 자존심 접고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이후 AFP통신은 9월 12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일대를 강타한 홍수로 133명이 숨지고 395명이 실종됐고, 3만5500가구 이상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며 피해 규모가 북한의 첫 발표보다 크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3일 3~5면에 걸쳐 수해 복구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만, 국제기구는 대규모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9월 중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52만 달러(5억9000만 원 상당)를 지원했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북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평양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늦추면서까지 수해 복구에 주력했다. 자존심을 접고 국제사회에 수해 지원도 요청했다.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3일 헬렌 클라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 같은 달 24일에는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과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를 만나 수해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엔대표부 권정근 참사는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함북 지역 수해 현황을 설명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국제 구호단체는 물론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초래한 두만강 홍수.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시내에선 일부 건물이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에 잠겼고, 혜산에서는 5층 아파트가 무너져 80여 명이 사망했다.

들에까지 지원 요청을 하면서 정작 '최대 우방'인 중국에는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 외무성은 9월 14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모임에서 수해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공식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초대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더욱 냉각된 북·중관계의 상황과 '대북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다음 날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 내에서도 지

북한은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평양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늦추면서까지 수해 복구에 나섰다. 자존심을 접고 국제사회에 수해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나 반향은 적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52만 달러를 지원하고,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식량 지원 등을 했을 뿐이다.

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54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9월 초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3국 대북 접촉을 신청했으나 통일부는 불허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잠정 중단하면서 방북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접촉과 팩스 등을 통한 간접 대북 접촉도 일절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는 상황에선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내 민간단체 수해 지원 신청, 통일부는 "NO"

특히 8월 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이후로도 북한이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명명한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민간의 대북 수해 지원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9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은 수해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수해 지원이) 당면한 북한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과는 관계없는, 민생과는 관계없는 부분에 자기들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다음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봐 스스로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주민을 돌보지 않고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북한 당국을 비난했다.

북민협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국내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직접적인 대북 수해 지원을 차단하자 국제기구와 해외동포단체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북민협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 2억여 원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보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역시 함경북도 지역에 라면과 밀가루, 아동용 방한복 등을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12일 "수해 발생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행태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막을 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북 수해 지원을 무작정 막는 정부의 완고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3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규모 수해를 본 북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국제 구호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어야 하며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대북 수해 지원을 주장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두만강의 한 북한 마을. 함북 지역의 피해가 자심한 데도 김정은은 현지 방문을 하지 않았다.

정부, 국제기구 통한 우회 지원도 "부적절"

다음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북 수해 지원을 주문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민간단체는 수해 지원을 하는데 우리 민간단체는 왜 수해 지원을 할 수 없느냐"는 한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인도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수해 관련 사항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냄에 따라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월 14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장관이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박근혜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이면 원칙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NUAC

북한의 물류와 시장

운송업자·주유소 등장… 평양도 '택배'가 가능해졌다

북한에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새벽장, 골목장, 메뚜기장이 활기를 띠고 국경을 통한 물류가 등장했다. 이제는 우리의 택배처럼 물건만 부치거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지고 있다.

2006년 11월에 찍은 평양의 배추 실은 트럭.

평양은 19개 구역과 3개 군으로 이뤄져 있다. 구글 어스와 그 지역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근거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조사한 결과 평양에는 구역과 군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시장이 존재했다. 각 도(道)의 시(市)급에는 2, 3개에서 많게는 8개 이상이, 군(郡)급에는 1개 이상의 시장이 존재해 이를 북한의 전 행정구역으로 확장하면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인정한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기존의 농민시장과 달리 농·토산품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일정 시설을 갖추고 세금(장세)을 걷는 공설시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북한에는 골목장, 메뚜기장 등 수많은 비공식 시장도 함께 존재한다.

종합시장인 평안남도 평성시의 옥전시장은 매일같이 북한 전역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도매하러 몰려드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오히려 옥전시장 바로 옆 공터의 새벽장에서 이뤄진다. 고객의 약 40%가 평양에서 온 상인인데 이들은 새벽시장에서 모든 거래를 마치고 오후 종합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평양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비공식 시장까지 합하면 북한의 시장은 400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시장은 점차 계층화되고 있다. 부자 동네 시장과 가난한 동네 시장의 형세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전환되면서 소비지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시장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시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순으로, 도급·시급·군급으로 계층화되었다.

도(道)급 시장이라고 해도 같은 도급이 아니다. 당국이 무역을 전면으로 개방하지 않았기에 북·중 국경지대와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 물류의 양과 시장의 등급에 격차가 생겼다. 북한은 시장이 국경지대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혜산, 회령, 무산, 온성, 라선, 신의주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국경지역은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거대한 소비지가 있어야 발전한다. 따라서 2차적으로 국경지역과 가까운 대도시에 시장이 발달했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평성 등이 그러하다. 북쪽은 청진, 남쪽은 평성에 큰 도매시장이 만들어졌다. 평성은 평양이라는 거대 소비지를 끼고 있어 시장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시장 유형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평성은 아주 못사는 이름 없는 도시였다. 북한은 전면적인 무역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국내로 유입시키느냐에 따라 시장 유형이 달라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시장의 주체는 북한 내 화교, 중국 연고자, 중국의 조선족이었다. 이들은 친척 방문 형태의 소규모 보따리무역을 했다. 따라서 도매시장이 신의주와 회령, 혜산, 온성, 무산 등 국경지역에 발달했다. 그곳들은 한때 북한의 '홍콩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무역회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역회사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들을 통해 중국에서 상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도매시장은 국경도시에서 청진과 같은 국경 인근 대도시에서 더 발달하게 됐다.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 박사. 통일부 자문위원,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일본 ERINA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등 역임. 주요 논문 '5·24 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등

대도시는 국경지대와 달리 장사 진입 장벽이 낮다. 국경지역으로 오기 위한 통행증이 필요 없어 상인들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다. 대도시인 만큼 도로망이 발달한 교통 요충지여서 왕래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북한의 교통망은 철도 중심인데 1990년대에 거의 파괴됐다. 따라서 한정된 운송수단으로 유통해야 하므로 국내 운송비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그럼에도 북한 안의 남북 간에는 상품 이동이 발생했다. 이유는 북한의 남과 북에서 유입되는 상품의 품목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차이가 흐름을 만든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은 북쪽으론 청진, 남쪽으로는 평성이다. 평성은 주로 신의주에서, 청진은 혜산·회령·무산·온성·라선 등에서 상품이 유입된다. 신의주에는 대개 중국 단둥을 통해 상품이 들어온다. 상품의 원산지는 주로 선양, 다롄, 칭다오 및 중국의 남방이었다. 혜산, 회령, 무산, 온성, 라선에는 옌볜, 투먼, 룽징을 통해 상품이 유입됐다. 상품의 원산지는 대개 중국의 동북 3성이었다.

중국 단둥을 통해 유입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서 조달됐기에 질이 좋다. 반면 옌볜이나 투먼, 룽징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질이 떨어져 가격이 저렴했다. 신의주에서는 고가의 가전제품, 자동차와 오토바이 부품 외에도 한국 화장품 등이 유입됐다. 혜산, 회령, 무산, 온성, 라선에는 식품을 비롯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들어왔다.

라선으로는 의류, 신발 등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가 대량으로 들어온다. 평성은 이를 활용해서 만든 옷이 전국의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곳이다. 청진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유명하다. 사리원은 1990년대 중반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곡창지대의 장점을 살려 국내산 농·토산품의 도매시장으로 유명해졌다.

이러한 물류 유통은 '도로 사정의 개선'과 '유통수단의 개선'으로 가능해졌다. 도로의 경우, 2000년 이후 북·중 간 수출 증대로 개선이 이뤄졌다. 유통수단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5톤에서 30, 40톤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있었다. 현재는 개인이 컨테이너트럭을 구입해 장거리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운송업자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물류운송 늘면 이동·정보 통제 약화

유통업의 발달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일반 주민의 삶이 도보 중심이고, 배급체계가 정상일 때는 물자를 수송할 필요가 없었다. 자전거는 우리의 자가용과 맞먹을 정도의 고가였었고, 쉽게 보유할 수 없는 사치품에 해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시장 확대로 300~400달러의 일제 중고 자전거가 필수품이 되었다.

한쪽에서는 빵 한 조각이 없어 굶어 죽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고가의 일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 몰려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장사를 위해 구입한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운송수단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한 가구당 2, 3대의 자전거 보유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기관 명의를 빌려 버스를 운행하는 개인 장거리 운송업자가 등장했다. 현재는 각 도뿐만 아니라 시·군급까지도 노선이 연결돼 일반인의 장거리 이동을 막던 장벽이 낮아졌다. 그러나 버스에서는 승객보다 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차장이나 운전수가 승객의 짐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됨으로써, 상인들은 짐을 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버스가 택배업을 겸하게 된 것이다.

여객 운송에서 물류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개인이 중국에서 5톤에서 최대 20톤짜리 컨테이너차량을 구입해 기관 명의를 빌려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운송업자가 등장한 것이다. 청진~평양, 청진~평성으로 나가는 트럭은 일주일에 세 차례 정도 운행하는데, 한 차례당 편도로 1000달러가 넘는 수익을 창출해 고수익 업종으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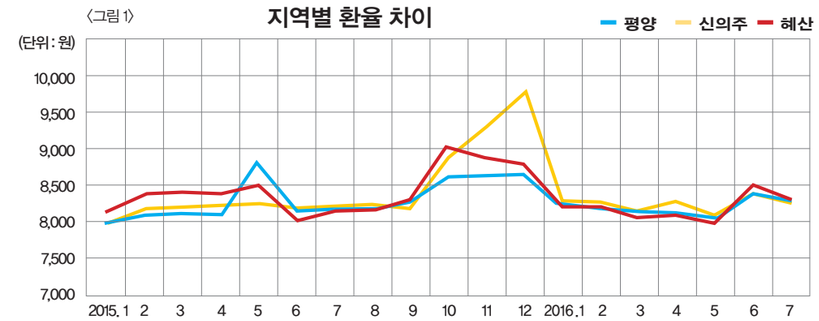
유통업 발달은 물류창고업을 비롯해 기름(가솔린, 휘발유) 장사, 통신수단의 보급, 사(私)금융시장 등 또 다른 시장들을 파생시켰다. 정기적으로 청진~평양을 왕래하는 10톤 트럭의 주인은 어느 공장기업소의 창고를 빌려 평양으로 나가는 모든 물건을 집적시키고, 짐이 모여지면 떠났다. 개인집을 빌려서 물류업을 하는 것보다 감시가 덜해 한층 효율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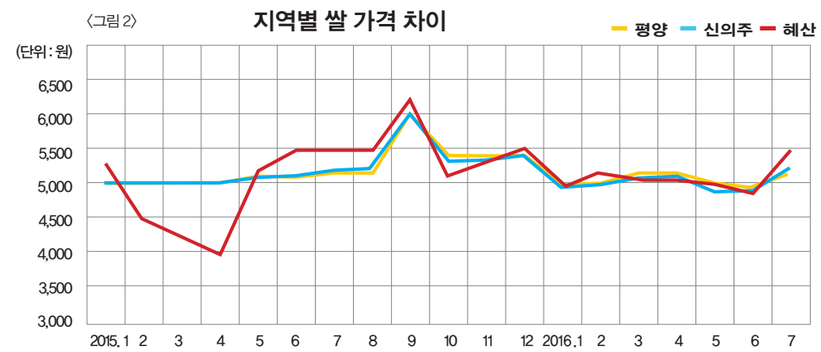
2003년 피랍탈북인권연대가 비디어로 찍어온 장소 미상의 북한 장마당. 쌀과 싱가포르 포카(Pokka)사가 만든 과일음료 캔, 중국 맥주 등이 거래되고 있다. 배급 봉괴가 생필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사람(상인)은 가지 않고 짐만 운반이 가능해지면서 운전수는 현금을 운반하는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돈주가 전국적인 연계망을 갖게 되면서 돈이 움직이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이관(移管) 결제' 시스템도 생겨났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되었다. 주요 길목에는 기름 장사꾼들이 모여 있어, 운전수는 어느 곳에서도 가솔린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기름은 국가 통제품이지만 고부가가치 상품이기에 기름 장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장사꾼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동과 정보의 통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지역 내 격차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한다.





운송수단의 확대와 발전은 상품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의 '승리28' 자동차로 한 차례 최대 1.5톤의 짐을 운반했다면 지금은 한꺼번에 20톤, 30톤씩 운반한다. 상품 공급의 증가는 상품 가격을 인하시키고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어 균형가격이 형성되게 만든다.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운송수단 확대로 지역별 가격 격차 줄어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 원산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평양에서는 한 달 후에나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먹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환율 및 식량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그림〉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주, 평양, 혜산 간 환율 및 식량 가격은 거의 균등하다.

1990년대 북한에서 최대 30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설이 있었다. 그 원인은 식량의 총 생산량 감소에도 있지만, 전력난으로 철도운송체계가 마비돼 생산된 식량을 균등하게 전국으로 분배하는 데 실패해서 초래된 측면도 강하다. 운송체계의 마비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발생했었다. 그 속에서 횡령과 부패 등 약탈이 빈발해 원활한 식량 수송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유통업의 발달은 북한에서도 동일 상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이 형성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 가격, 식량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의 운송체계도 주요 요소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UAC

1989년 11월10일 동독이 국경을 개방한다는 발표가 있자, 베를린의 브란데부르크문 곁에 있는 베를린장벽에 올라가 통일을 자축하는 동서베를린 시민들.

무너진 베를린 장벽, 휴전선은 언제 열릴까

합의에 기반한 통합능력·포용력이 통일 가능케 해

독일처럼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 기반을 넓혀가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다.

공용철 KBS PD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KBS 다큐멘터리국 책임 프로듀서·심의부장, 민주평통 상임위원(16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통일언론상 대상, 국민포장 수상. KBS 주요 프로그램 '현지 르포, 북한-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2006).

베를린을 찾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옛날 장벽이 세워졌던 자리와 브란덴부르크 문이다. 통일 이전에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장벽을 따라서는 각종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의 중심가 파리저 광장(Pariser Platz)에 있는 건축물로 운터덴린덴로(Unter den Linden)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문은 독일 분단 시절 동·서베를린의 경계였으며, 독일 통일과 함께 베를린의 상징이 됐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명령으로 1788년에서 1791년까지에 걸쳐 건축됐다. 프로이센 제국의 건축가였던 칼 고트하르트 랑한스가 설계했고, 초기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다. 1989년 11월 9일 약 10만여 명의 인파가 이 문 앞에 운집한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나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는 한국인들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베를린을 세 차례나 찾았던 필자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분단된 나라였지만 독일은 장벽을 허물고 유럽의 최강국으로 우뚝 선 반면 우리나라는 분단체제가 강고해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번 합의하면 번복이 없다

독일은 추축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자 패전국이다. 600여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국가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베를린이 네 곳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를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조차 베를린의 분할과 동서독의 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일제의 잔인한 식민통치의 피해자이자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끌려가 일제의 총알받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용과 종군위안부 등으로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다. 전시 동원체제에서 전 국민이 수탈을 당했고 민족의 자존심이 짓이겨졌다.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전쟁의 가해국가는 강대국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일을 이뤘고, 식민과 전쟁의 피해국은 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독일과 한국, 무너진 베를린 장벽과 강고한 휴전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독일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독일을 보고 첫 번째로 놀란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통합 능력이었다. 8000만 명이 넘는 서유럽 최대의 인구대국이자 다민족국가가 노동, 건강보험, 연금개혁을 척척 해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 스펀지처럼 시스템 내로 잘 흡수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일본도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도 국가나 공적 기구가 결정을 하면 일단 따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력한 국가권력에 순응했던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둘째, 필자가 더 주목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합의 능력이다. 국가나 공적 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다. 그리고 결정이 합의에 기초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순응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오늘의 독일이 있기까지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하고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가 승계한 '어젠다 2010'이 있었다. 어젠다 2010을 통해서 독일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건강보험·연금·노동개혁을 이뤄내고 유럽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불리는 '하르츠 개혁안'의 합의 과정이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었다. 하르츠위원회는 실업과 노동개혁에 대해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교집합을

혹한 속에서 전선을 지키는 육군 장병들. 언제 우리는 휴전선을 허물고 통일을 할 것인가.

확대해나갔다.

하르츠위원회가 독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요소들은 빼고 합의 가능했던 부분만 모아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르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를 독일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과정도 흥미롭다. 하르츠개혁안들은 네 차례로 나뉘어 입법화됐다. 하르츠 1~4가 그것이다. 합의 가능한 부분들부터 입법화하다 보니 동일한 법안이 수년에 걸쳐 분할 처리된 것이다.

게르만의 위대한 포용 능력

합의는 어렵지만 한번 이뤄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더 어렵다. 독일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을 가능케 했던 '동방정책', 통일 이후 독일의 부활을 가져왔던 '어젠다 2010'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독일을 보면서 두 번째로 놀란 부분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넓은 포용 능력이었다. 분단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서독은 460여만 명의 동독 출신 이주자들을 받아들였다. 동독 국민들의 서독행이 줄을 잇자 동독은 1961년 베를린 장벽까지 세웠지만 탈주 행렬을 막지는 못했다. 심지어 동독을 이탈하려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국경경비대원까지 장벽을 넘어 서독행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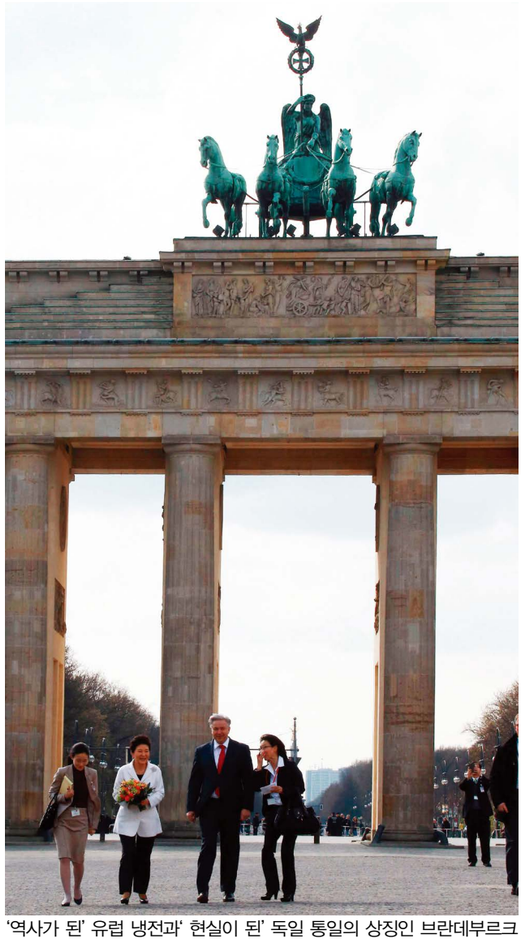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독행을 택했던 것은 자유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서독으로 먼저 간 친척과 친구들이 별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하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였고 모델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독 사회가 갖고 있던 넓은 포용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서독은 동독에서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에겐 서독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사람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동독 출신이라고 해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도 없었다.

동독을 탈출해 서독에 정착한 사람들을 부르는 고유명사도 없었다. 그냥 충청도, 경상도 하듯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호칭만 있을 뿐이었다. 출신, 지역, 학력, 성별, 나이 등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능력, 이것이 필자가 주목한 독일 통일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힘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 3일 통일이 완성되기까지 동독 주민들의 행로를 보아도 그 점은 뚜렷하다.

1990년 3월 18일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의 통일을 결정했다.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를 하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독과의 통일을 결정한 주체는 동독 주민들이었다.

독일인들은 합의를 이뤄내고, 합의한 것은 지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것이 통일 후 통합을 이뤄내는 기반이었다. 답답한 것은 우리다. 핵무력으로 폭주하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국제화돼 남북한 당사자들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 광복 이후 71년이 지났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인 것 같다.



'역사가 된' 유럽 냉전과' 현실이 된'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데부르크 문. 2014년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다.

서독은 동독 주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토대를 제공했다. 동방정책을 통해서 구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따뜻하게 포용했다. 독일 통일이 가능하기까지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서독의 눈부신 경제적 성취도 있었다.

경제적 성취 위에 잘 갖춰진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제도,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넓은 포용 능력,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의 일관성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을 앞당긴 힘이었다.

왜 우리는 우리 문제를 국제화하는가

한반도는 지금 전지구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북녘 정권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지해 주민들을 폭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대북 및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한반도의 통일 비전과 정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핵무력 강화를 향해 폭주하는 북한 때문에 남북한 문제가 국제화돼 남북한 당사자들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잔혹한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면서 분단된 한반도임에도 광복 71년을 맞은 지금까지 통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진정 무엇일까?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 기반을 넓혀가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NUAC

한삼화 경북지역회의 부의장

삼국통일의 후예가 남북통일도 이끈다

단합이 잘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경북지역회의는 화랑의 맥을 이어 통일서원제 등을 펼치고 있다.

한삼화 부의장은 민주평통 11기부터 4기에 걸쳐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부의장직도 이번까지 3회째 맡아 봉사하고 있다.
1 지난 6월 열린 여성 화합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한 부의장.
2 지난 10월 7일 열린 '통일서원제'에서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한 부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3 경북지역회의에 소속된 각 협의회장과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개 시·군 협의회가 한 지붕 아래 모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는 단합이 잘되기로 소문나 있다. 스무 개가 넘는 지역협의회가 상당히 광범한 지역에 분포돼 있으나 어느 지역보다 원활하게 호흡을 맞춰 통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의 성금을 걷어 기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통일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지역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앞장서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모든 협의회장님이 흔쾌히 발 벗고 나서서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상 모금 활동을 앞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회의 한삼화 부의장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뒤로 감춘다. 그저 '각 협의회가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일 뿐이라는, 낮춤과 섬김의 마음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의 성과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야말로 경북지역회의가 '단합의 아이콘'이 된 비결이다.

통일 대박 못 보는 국민과 북한 정권 안타까워

젊은 시절 한국청년회의소 활동을 시작으로 라이온스클럽, 대한체육회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삼화 부의장이 '민주평통호(號)'에 승선한 것은 11기 때의 일. 자문위원으로 출발해서 12기, 13기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을 연임했고, 14~16기 자문위원을 거쳐 다시 17기에 부의장을 맡았으니, 경북지역회의의 안팎살림에 누구보다 통달할 수밖에 없다.

경북지역회의는 또한 대행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도 손꼽힌다. 지난 3월 안동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경북도청 신청사에 입주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는 사무실 이전에 즈음하여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도청과의 공조 의지를 다시금 공고하게 다졌다. 지난 8월에는 지역협회의장들과 여성분과위원장들이 경북도청 신청사를 방문해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직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북지역은 삼국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수도 경주가 위치한 만큼 젊은이들의 통일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 경북지역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경북지역 청년 자문위원, 지역 대학생 연인원 30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 청년 및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통일아카데미의 부제는 '유오산천 통일화랑 수련회'. 신라의 통일 중추세력이었던 화랑들이 '서로 도의를 닦고, 서로 가악(歌樂)으로 즐겁게 하며, 명산과 대천(大川)을 찾아 멀리 가보는' 뜻을 세운 도의상마(道義相磨), 상열가락(相悅歌樂), 유오산천(遊娛山川)을 기본 개념으로 1일차 학술 강좌(도의상마)에 이어 2일차에는 분단의 아픔이 배어 있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경주 통일전 현장을 방문(유오산천)하고 소감문을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로 38회를 맞은 경북도 주최 '통일서원제(10월 7일, 경주 통일전)'에도 한삼화 부의장을 비롯한 23개 지역협의회 회장이 전원 참석해 단결력을 과시했다고.

"이렇듯 모든 협의회가 마음을 맞춰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통일 운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상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금도 한국은 충분히 잘사는데 왜 비싼 비용을 감수하며 통일을 하려 하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거든요."

친환경 벽돌 제조업체 삼환C1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기업 경영 경험을 쌓아온 한삼화 부의장으로서는 '전문 기업가'의 식견으로 볼 때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이익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런 '통일 대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과 북한 정권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더 통일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삼화 부의장이 경북지역회의를 통일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NUAC

1 김영수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통일토크쇼. 곽인수, 안명철 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2 해외자문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박근혜 대통령이 유호열 수석부의장(오른쪽) 등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3 업무보고를 하는 권태오 사무처장.

사는 곳은 달라도 조국 통일은 한마음

"울면서 나갔던 여러분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92개국 해외자문위원들이 3박 4일간 한자리에 모여 고국의 미래와 평화통일을 위한 혜안을 모은 현장을 중계한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계절은 바뀝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10월 12일 오전 연단에 오른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부의장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말로 개회를 알렸다. 송창근 아세안지역회의 부의장은 "한 특강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를, 배움을 얻으려면 교수를, 은혜를 받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면 기업인을 찾아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평화통일도 사업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해 주재국에서 본이 되는 그런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하는 자문위원들의 모습은 분명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해외자문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어려웠던 과거를 회고하며 "많은 분들이 울면서 해외로 나갔지만 이제는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들이 자랑스럽게 고국에 모여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통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통일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한 후 "사드 배치는 군사적, 안보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까지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북한 도발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때

그는 "사드 배치는 우리 5천만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평통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사드의 필요성과 한계, 제약 등을 설명하고 설득 가능한 단계로 전환시킨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북한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거나,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북한 문제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설명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급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독자 제재를 통해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음을 경고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임토의 발표를 듣는 지역협의회장들.

하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한류, 통일 의지 확산에도 크게 기여

'실크로드와 한류로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한류는 드라마와 K-팝으로 끝나지 않는다.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원래 문화 기반 위에서 새롭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V 드라마 '대장금' 이후 사그라들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깨고 한류는 K-팝, K-뷰티, 치맥 문화의 전파로 이어지는 다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문화콘텐츠와 제조업이 연결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류의 확산은 통일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이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반해 김정은은 5년 사이 4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의 반 이상인 22발이 지난 9개월 사이에 발사됐다"면서 현 시기의 엄중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영화 '태양 아래'를 만든 감독과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러시아인인 감독은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구소련보다 더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면서 "스탈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갖고 있었다. 예술가도 영화감독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제재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제재는 금방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지만 꾸준히 압박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입수되는 북한 문건에서는 제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과 고려인의 통합 중요성을 강조한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의 분임토의(위). 철원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해외자문위원들.

오후 일정의 마지막은 분임토의와 결과 발표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나선 서남아협의회는 "태국 23명을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까지 9개국에서 85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사관, 유관기관, 한인단체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과거 '민주평통 행사의 옵서버' 정도로 인식되던 대사의 역할을 민주평통의 대행 기관장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자문위원 수가 1명에 불과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사례를 소개하며 자문위원 수를 확대해 좀 더 활발한 통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전했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에 한국 학생만이 아닌 현지 인도네시아 학생과 외국계 학교 학생들이 2인 1조로 함께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도네시아 내 한국인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인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 한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지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 활동, 성과도 풍성

홍콩, 마카오, 필리핀, 팔라우 지역을 포함한 동남아북부협의회는 "탈북 대학생들과 탈북 청년 그리고 한인 청년들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취업난 등으로 한국에서는 길을 찾기 어려운 탈북 청년들에게 쉴 공간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탈북 청소년과 한인 청소년을 한 주에 두 번씩 만나게 해 무려 8시간 동안 소통하게 하는 노력을 3년간 펼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베트남협의회는 한·베트남 다문화 사업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베트남에 있는 한·베트남 가족은 베트남과 한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집중 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호주협의회는 "민간 외교 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북한인권법 호주의회 상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지난 9월 22일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에게 첫 번째 초안을 결의안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뉴질랜드협의회는 2016년 5월 10일 뉴질랜드 국회 본회의에서 강한 메시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소개하면서 웰링턴 차세대 통일포럼, 탈북자 초청강연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모스크바협의회는 "올해 7월 NGO법 개정 이후 한인 자문위원과 고려인 동포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

한류로드에 대해 강연한 최광식 고려대 교수.

이지완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의 발표.

법과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고려인 동포와 현지 주류사회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했다. 고려인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통일 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실천해나갈 것도 다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부랴트, 사할린, 마가단, 캄차카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며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현지 통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북핵 규탄이나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만큼 전통문화 페스티벌이나 통일 기원 페스티벌 등 문화를 매개로 한 통일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지 상황도 소개했다.

중앙아시아협의회는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 기원 노래 부르기는 몽골 국영방송에도 방영될 만큼 화제가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도 몽골 건설 현장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한 채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있는 북한 노동자 이철수 씨와 그 팀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바친다"고 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영국협의회는 "영국에도 많은 탈북민이 있다"면서 "교민사회에서 이들과 어울려 정서적인 지원, 언어적인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우면서 한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탈북민의 상황을 전했다.

남유럽협의회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비롯해 2015년 차세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대회, 통일골든벨 등 그간의 행사를 소개하고 "통일의 주역은 결국 우리의 2세, 3세인 차세대이므로 이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에도 어린이 통일캠프, 통일 그림엽서 그리기 대회, 통일 외교안보 발표대회 등의 행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향의 봄'을 열창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녹인 북유럽협의회는 "최근 2박 3일 연수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모두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통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마음만큼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중동지역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현황을 전한 중동협의회는 "급여 중 90% 이상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야 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착취 구조를 고발하고 추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금주국가에서 밀주 제조에까지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그 실상을 알렸다.

올해로 출범 2기를 맞은 아프리카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에서 한 것들을 벤치마킹하다 보니 조찬기도회, 서바이벌 퀴즈대회, 그림 그리기, 규탄대회,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들을 치를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행사들의 참여도를 분석해보니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3일 오전 '사드 배치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정책설명에 나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관련 내용들은 비밀자료들이 많다.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자기만의 경로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에 근거해 말씀을 하시거나 정치적 편향을 넣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국방과 안보는 사활의 문제로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려는 의도도 보인다"면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으며 엔진 출력 능력 또한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이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그것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실행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인식의 성숙함 필요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쓰인 10킬로톤짜리 핵이 지표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용산 지역에 떨어지면 입력 요소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상자가 34만, 사망자가 18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다"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드가 갖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과 과학적 분석 결과가 있었다"면서 "사드는 100m만 피하면 안전하며, 기지 주변으로 펜스가 쳐져 울타리 밖 지역주민들은 전자파로부터 절대 안전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통일토크쇼에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안명철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곽 위원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동안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에서 남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기 전 탈북해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진 것으로 들었다. 지금 북한에는 결핵, 콜레라 등이 창궐하고 병사들의 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말도 있다"고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생산국, 제조국, 유통국"이라고 소개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부친이 식량배급소 간부로 일할 만큼 출신성분이 좋았다"고 밝힌 안명철 대표는 "부친이 술김에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를 비판하다 문제가 되어 음독자살하고 일가족은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되었다"면서 탈북의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철저한 감시사회이므로 민심이 떠났다 해서 당장에 쿠데타 등의 방법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는 힘들다"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돈주'라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시장경제가 스며들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 역시 대북 풍선 날리기와 비무장지대(DMZ) 대북 방송 등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산업화로 중국에서 버린 구형 컴퓨터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기들이 남한의 드라마 등을 보급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세뇌된 사상을 깨우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날 오후 해외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는 다짐의 말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호주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다양한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호주협의회의 소식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며, "고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폭압에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와 군인들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북한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 고통 받는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NUAC

송창근 아세안 부의장 "통일 활동도 사업을 하듯이, 실천을 해야 통일이 된다"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모두는 사업가다. 평화통일 활동도 사업을 하듯 실천해야 한다.' 궐기대회를 하듯 통일을 외치기만 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동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들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효도를 해야 하는 명분이 생기듯 나를 있게 한 조국을 위해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엔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이미지가 굳건해져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민들도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진행하는 행사들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어서 제대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실천 없는 약속에서 벗어나자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를 꿈꿨다는 송창근 아세안 부의장은 해외에서 그 꿈을 이뤘다. 27년 전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그는 나이키, 컨버스, 헌터 등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인도네시아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엔 세계한상대회장으로 활약하는 등 세계무대를 상대로 한 무역 활동으로도 눈코 뜰 새 없다.

그런 그가 바쁜 시간을 쪼개 17기 민주평통 아세안 부의장직을 수락한 데는 오랜 세월 해외에서 쌓은 사회적 기반을 민주평통이 해나가고 있는 통일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국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할 역할이 있듯이, 해외 자문위원들에게는 그들이 각 국가에서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미 통일은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 북한과 남한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의 관심과 지지 없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 각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잘해나가는 것부터가 통일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가 부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회의는 자그마치 48개국, 9개 협의회가 함께하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주류층과 유대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영향력을 발휘해나간다는 공통점은 지켜나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아세안지역회의의 화두는 실천 없는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다.

"각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잘해주고 계셔서 제 역할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세안지역회의 내 9개 협의회가 더 단합하고 잘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민주평통이 고령화되고 있다, 차세대 육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어 행사 참석 등이 어렵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정도를 인지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조경행 중동협의회 이집트지회장 "독립의 서곡이 열린 카이로에서 통일의 단초를 선언한다"

아세안·유럽 해외지역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경행 이집트지회장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16 한반도 통일포럼'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카이로 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포럼은 연합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카이로 선언 7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2016 한반도 통일포럼'은 카이로 선언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빛난다.

중동협의회의 구성은 다소 특이하다. 이집트와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등 5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아랍어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집트는 북한과 눈에 띄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이로에 북한대사관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안고 있는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집트 정세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져 정치적 이슈를 거론했다가는 되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첩보 수준을 방불케 하는 준비 과정과 안전 대비를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첩보전 방불한 탈북강사 초청 강연

"지난해 탈북자 김영욱 씨를 모셔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머무는 동안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여간 염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모시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우리 자문위원 중 한 분 댁에 모셔 강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여하는 교민들도 마음속으로 많은 각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 도중 참석한 교민들이 눈물바다를 이룬 것도 그런 이유가 컸겠지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도 있다. 과거에 비해 운영체계도 많이 잡혔고 누리소통망(SNS) 등이 발달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자문위원들 간 소통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행사가 열릴 때마다 너도 나도 힘을 보태고 스스로 기금 마련에 나서는 모습도 많은 의지가 되어주고 있다.

장학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에인샴스대학 한국어과에는 8년째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북부아프리카지역에서 이곳 출신 학생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도사이다. 1995년 한인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카이로에 한국학교를 설립했다. 카이로한인학교는 이 지역 유일의 한국학교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집트지회에서는 차세대 육성·지원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한 데다 통일 문제에 대해 아랍어로 말할 수 있는 강사가 없는 만큼 이곳 출신 학생들은 현지인 대상 사업이나 행사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들에게 남겨진 것은 언어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통일골든벨 대회에서 카이로 대표로 출전했던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한 친구들과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해외지역 학생들끼리 경합하는 통일골든벨 대회를 따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자 바람이다. 차세대들의 값진 땀방울을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사명이자 보람이다.

이혜경 베트남협의회 자문위원

"한·베트남 2세대가 바로 한국과 베트남 교류를 위한 인재입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베트남에 거주하려면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반공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요. 한국학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베트남학교에 다녔으니,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을 무척 기다렸어요. 공장에 주재원으로 와계신 한국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사업가인 남편을 따라 베트남으로 간 이혜경 자문위원은 1998년, 베트남 최초의 한인여성부인회를 창설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보다는 교민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좋았다. 현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다. 그러다 1999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던 한국학교의 건립을 총영사관에 건의하게 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후원금을 모으고, 학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을 정리하고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사명감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일곱 살이 되어 베트남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호치민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지요. '우리나라'를 '베트남'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한국 식당에 가서도 메뉴 아래 쓰인 '개시'라는 말을 알지 못해 '엄마, 나는 개시는 못 먹어봤어요' 하더군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도 도움을 준다

그런 경험은 이 자문위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학교 설립이 추진되자 주재원으로 와있던 많은 이들이 후원금을 기탁했다. 유영방 총영사도 물심양면 힘을 보탰다. 이후 여성부인회는 한인회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사이공의 한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지금도 무보수 봉사자들로 구성된다. 이런 이력 덕분에 그는 지난 16기 베트남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한·베트남 2세들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들입니다. 베트남에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존재하지만 이 한·베트남 2세들처럼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빠는 경제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결국 육아는 베트남인 엄마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일주일에 3시간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나라 사랑 그리기 대회'와 같은 문화 행사다.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간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적었던 부모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참여 주체는 한·베트남 2세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아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온 가족이 소풍을 나온 듯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한국의 역사와 국기, 무궁화, 독도, 세종대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

베트남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 아이들의 교육 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이 멀어 학교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오지의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자전거 전달식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전거를 타고!'라는 슬로건이 언제나 함께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베트남 아이들에게도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권영관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

"폴란드를 알면 사드가 보이고 통일 후의 통합 방안도 보인다"

폴란드 한인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영관 자문위원은 폴란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는 통일한국을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폴란드로 갔다.

"폴란드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에 발판이 된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민주화된 데는 폴란드 출신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영향이 컸지요. 가톨릭의 수장이고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던 그를 통해 폴란드인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고 봅니다."

폴란드 자유노조의 세력 확장은 구소련의 민주화에도 불을 당겼다. 동유럽 국가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45년 동안 공산 치하에 있던 나라에 밀려든 자유주의의 물결은 불안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하루아침에 물가가 10배 이상 치솟을 정도로 경제가 불안한 것은 물론 언제 또다시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뒤엎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를 하고 갔음에도 이방인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 일으켜

"폴란드가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혼란 상황은 우리의 통일 과정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인데, 의외로 국내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숙원이었던 폴란드와 한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시행착오만이 아니다. 북한과 폴란드는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우리의 사드 배치와 비슷한 미사일 방어망 문제로 한 차례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우리의 안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도 우리는 폴란드 등을 '동유럽 국가'로 통칭하고 있지만 유럽 내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동유럽 국가라 칭하지 않는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 정상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에 위치한 비세그라드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를 '중유럽 국가'라 칭하며 정치·경제·문화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폴란드협의회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통일 활동은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다. 폴란드판 뉴스위크에도 한 면 기사로 소개될 만큼 이슈가 되었던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데는 그의 공로가 적지 않았다. 기사의 파급 효과는 굉장했다. 여론이 일자 폴란드 외교부는 올해부터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암묵적으로 중단했다. 폴란드의 한 야당은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우리는 폴란드가 가진 가치를 재평가해봐야 합니다.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진정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강연(10월 18일, 광주지역 연수)

북한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10월 18일, 부산지역 연수)

이영종 기자의 강연(10월 20일, 대전지역 연수)

권태오 사무처장 강연(10월 6일, 이천, 경기지역 연수)

2016년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 열려

북한·통일·외교 분야 다양한 주제로 강연, 통일 전문가 양성

2016년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가 8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통영(9월 22일), 양평·원주(9월 27일), 단양(9월 29일) 등에서 개최됐다. 10월에는 이천(10월 6일), 구미(10월 10일), 부산·광주(10월 18일), 대전(10월 20일), 영광(10월 27일)에서 열렸다. 11월 이후에는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통일, 안보, 외교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며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자문위원으로서의 통일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지역 자문위원 연수에서는 '북핵 폐기와 통일 국론 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특강이 있었다.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핵에 무섭게 집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8월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수백명의 군인과 주민이 목숨을 잃었으나 북한 정권은 며칠 뒤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통상적으로 자국민이 엄청난 홍수 피해를 보았다면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를 우선해야 하나 북한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은을 통상적인 지도자로 보기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렇듯 북한 정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며 핵 개발에 집착하기에 과연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북핵을 용인하는 토대 위에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북핵 포기는 어렵지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핵을 보유하는 데 따른 대가를 동시에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제재는 북한 정권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의 장으로 다시 복귀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 동트기 전이고,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어려운 순간은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라는 그 직전"이라고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감내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국론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내외 2만 자문위원들이 의장이신 대통령에게 통일과 관련된, 또는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자문을 드리는 것이며 '민주평통 자문건의'의 핵심은 어느 석학의 고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건의하는 풀뿌리 정책건의"라며 "이번 자문위원 연수에 참가한 자문위원들이 많은 지식을 얻어감으로써 자문건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북핵 위기 극복과 통일 여론 형성에도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

권태오 사무처장은 10월 6일 이천 혜지움연수원에서 열린 자문위원 연수에서 북한에 대해 1970년대와 2016년이 공존하는 사회이자 늘 무력 도발을 시도하는 국가라고 정의하며 "이는 북한에는 대단한 취약점으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더불어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마지막 남북 협력의 줄마저 끊어버리게 하는 가슴 아픔 결단을 하게 됐다"며 "이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현금이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러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하였으나 그 치열했던 논의 배경과 과정은 생략된 채 배치 결과만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버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은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 연수는 권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국제 정세, 북한 체제, 탈북민 정착 등 북한 관련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연수에서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처 방안', 그리고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와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가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 실상'에 대해 강연한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과 북한 실상을 생생하게 들려 줄 통일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한다.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제138차 민주평통 운영위원회(위원장 유호열 수석부의장)가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사무처 회의실에서 17개 시·도부의장, 이북5도 부의장, 여성부의장, 중국부의장, 미주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운영위원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국론 분열"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북핵 규탄과 통일을 위해서 국론 결집을 해나가는 일이 바로 민주평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평통 회의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7개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으며, 전체 규정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외에도 중국지역 통일의견 수렴 간담회, 해외지역회의, 하반기 분과회의 등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권태오 사무처장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10월 7일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총 7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권 사무처장은 특강을 통해 "이번 강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안보 현실과 대응 방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단합된 국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며 "자문위원들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권 사무처장의 강연 후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서울지역회의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 통일좌담회 개최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10월 6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를 초청해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과정과 쟁점 등을 설명하며, 향후 과제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제도들의 조화로운 운영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북한 인권 개선정책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의 지혜와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좌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통 여성자문위원들과 변호사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 기관·단체 차원의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
중앙아시아협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식 맺어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0월 1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협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유오복 안산시협의회장과 이재완 중앙아시아협의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제종길 안산시장,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재외동포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호협력을 통해 통일 기반 구축에 노력하기 위한 협약서, 협약패를 교환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만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서로 위안해주며 서로간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두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고려인 차세대 교육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
"도라산역에서 펼치는 통일 상상"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10월 18일 양목초등학교 6학년생 90여 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을 방문하는 통일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도라산역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경의선철도와 유라시아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여행 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으며, 통일 한 줄 생각하기를 통해 '통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통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협의회
수성대 베트남 유학생 위한 장학금 전달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0월 14일 베트남협의회(회장 유명식)와 '수성구협의회·베트남협의회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은 후 수성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수성대에 기탁했다.

신철범 수성구협의회장은 "베트남협의회와의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그 첫 번째로 수성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 평창군협의회

평화통일 염원 전국웅변대회 열어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10월 13일 강원 평창군에 소재한 이승복기념관에서 박용성 강원부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영해 평창군협의회장 등을 비롯한 도내 시·군협의회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및 이승복 추모 전국웅변대회를 열었다.

'애국 소년 이승복의 얼 확산, 평화올림픽 구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웅변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초·중·고, 대학, 일반부 32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리는 뭘 했나'를 연제로 뛰어난 웅변 실력을 선보인 오지은(충북 남성중 1) 양이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대구지역회의

"한국에서 받은 사랑, 봉사로 돌려줘야죠"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0월 13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더불향봉사단'과 대구 수성구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화성전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요양원 내 청소 활동 등을 하며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받기에만 익숙했던 우리가 나눠줄 수 있었던 이번 봉사는 참 뿌듯했고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

'통일음악회– 통일로 가는 대합창' 개최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0월 1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통일음악회–통일로 가는 대합창'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통일음악회는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노래를 남북한 비교 형식으로 꾸며 남북이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단일민족임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음악회에는 유명 성악가들의 가곡을 비롯해 평양 권설경예술단, 탈북 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 집' 아이들, 과천 음악이 있는 마을 합창단, 과천시니어합창단이 참가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천지역회의

인천지역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 열어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는 10월 6일부터 1박 2일 동안 인천지역회의 및 협의회 간사,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행정실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제17기 제3차 인천지역 통일 리더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김수정 강사의 '통일 스피치 대화 방법' 특강을 통해 각종 행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치 팁을 배우고, 분임토의를 통해 각 지역의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며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은 인천지역 통일 활동 활성화 및 통일 사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격식과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경기 광주시협의회

"통일희망농장에서 키운 햇고구마 드세요~"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0월 13일 퇴촌면에 있는 통일희망농장에서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 농작물 수확 행사를 가졌다.

경기 광주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함병식)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고구마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을 심어 가꾸어왔으며, 이날 수확한 햇고구마 30상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통일희망농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청양군협의회

'대학생 통일공감-통일시대 시민교실' 열어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0월 12일 충남도립대학 해오름관 소강당에서 '2016 대학생 통일공감-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시민교실에서는 먼저 조남인 충남대 초빙교수의 '북한의 위협과 실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가관'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연에서 이소연 북한 이탈 강사는 북한에서의 문화생활과 10년간의 군생활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 의성군협의회

태극기 나눠주며 나라 사랑 당부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10월 7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의성군 한마당 큰잔치'에서 '통일공감 나눔 봉사'를 개최했다.

의성군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국론 결집으로 평화통일 달성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마당 큰잔치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민주평통 홍보 전단지 4000장과 태극기 500여 개를 나눠주며 나라 사랑 마음을 당부했다.

경기 양평군협의회

용산전쟁기념관 등 방문, 통일 현장 견학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통일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통일 현장 견학에선 자문위원을 비롯해 강하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180여 명이 함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가한 한 5학년 학생은 "6·25전쟁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했는데 현재까지도 과거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자세히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

'작은 마음, 큰 통일' 통일콘서트 개최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는 10월 18일 에스컨벤션에서 여주시민과 함께 나누는 '작은 마음, 큰 통일' 통일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원경희 여주시장, 원욱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함께 나눠요! 함께 키워요!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통일토크 시간은 통일이 무섭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통일콘서트에 함께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 철원군협의회

'국론 결집과 평화통일 기원 한마당' 개최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태섭)는 10월 16일부터 3일 동안 철원군 지역축제인 태봉제에 참가해 철원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국론 결집과 평화통일 기원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정부의 통일정책 및 민주평통 홍보와 포토존 기념 촬영, 평화통일 기원문 작성하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나라 사랑과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태풍·지진 피해주민 돕기 이어져

최근 잇단 지진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경주와 울산지역 시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9월 29일 지진 피해 성금 1000만 원을 경주시에 전달했고,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는 지진과 태풍으로 침수된 주택 정리와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에 동참했다.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10월 14일 울산 남구청장실을 방문해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울산 동구협의회**(회장 지종찬)는 10월 19일 울산 동구청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울주군협의회**(회장 김달줄)도 10월 12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진장열 군수에게 전달했다.

울산지역회의 이진용 부의장 역시 10월 12일 태화종합시장 내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써달라며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에게 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부산 사상구협의회
통일맞이 한마음 축제 열어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10월 7일부터 3일 동안 삼락생태공원 내 낙동강사문화마당에서 열린 제16회 사상강변축제에서 주민들의 통일공감 형성을

위해 '통일맞이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통일맞이 홍보관에서는 북한 실상 설명회, 북한 군복 체험,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심리(고충)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
탈북 멘티들과 통일 역사·문화 공유

서울 중랑구협의회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멘티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역사·문화 탐방에 참가한 멘토와 멘티 총 38명은 멘티들과의 사랑방 대화, 통일 올레길 걷기, 언어생활 퀴즈, 탐방보고서 작성하기 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다.

제주도를 처음 방문한 북한이탈주민 멘티들은 아름다운 제주를 돌아보며 멘토들과 전쟁의 아픔, 안보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대구 달서구협의회
광주 북구협의회와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 개최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0월 7일 대구 달서구협의회, 광주 북구협의회 자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청에서 '대구 달서구·광주 북구협의회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두

협의회가 준비한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김옥열 달서구협의회장은 "양 협의회의 교류가 1999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동서화합으로 현재 북한의 도발 및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꾸준히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하자"고 말했다.

제주 제주시협의회
행복 나눔 투어 봉사활동 전개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고향심)는 10월 8일 행복둥지 제주사랑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주변 환경 청소 및 식사 봉사로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협의회는 6년째 행복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협의회
통일 염원 남북삼합제 열어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이종춘)는 10월 13일 통일 염원 남북삼합제(흙, 물, 사람)를 강동구 관내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2016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양준욱 서울시 의장 등 많은 내빈과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축하해주었다.

행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담아온 흙과 물을 무대에 비치한 항아리에 부어 합토·합수한 후 일자산 배드민턴장 옆에 조성된 통일동산(가칭)으로 이동해 기념수에 흙과 물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기념수 옆에 있는 화강암 기념비에서 제막식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념수와 기념비를 둘러싸고 통일을 염원하는 태극기를 힘차게 흔드는 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전북 전주시협의회
맛있는 통일밥상—'남북, 통일로 비비다'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분호)는 10월 20일부터 4일간 전주 완산구 소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 2016 전주비빔밥축제에서 북한 음식 판매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맛있는 통일밥상—남북, 통일로 비비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북한 음식인 감자전, 옥수수

죽을 맛보고 감자찰떡 만들기에도 참여하는 등 이색적인 북한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자문위원과 탈북민으로 구성된 전주시협의회 어깨동무하기팀은 '통일의 맛'을 보름달로 표현한 '통일로 그린 달빛'을 모티프로 한 비빔밥을 준비해 비빔밥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 서구협의회

"피란 시절 음식 드셔보세요~"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10월 7일부터 이틀간 관내 임시수도 기념거리에서 열린 '피란수도 부산 야행'에 민주평통 홍보 및 피란 시절 음식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 부산 서구협의회는 민주평통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임을 알리고 피란 시절 음식인 보리개떡과 주먹밥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힘들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피란수도 부산 야행'은 6·25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심장부였던 부산 서구에서 당시의 건축·문화 자산을 탐방하고 피란민들의 생활상을 전시, 공연, 체험 등을 통해 재조명하는 야간 프로그램이다.

강원 동해시협의회

평화통일 염원 '국기 사랑 나라 사랑' 행사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10월 8일부터 이틀간 천곡동 로터리 일원에서 '국기 사랑 나랑 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선양함으로써 국가관과 애국심,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국기의 존엄성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낡은 태극기를 가지고 오면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교환해주고, 태극 문양 페이스페인팅과 태극기 그리기 체험도 함께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

'눈물로 드리는 망향제' 개최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0월 6일 평화의 댐에서 실향민 1세대, 미망인 및 자문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북5도민회 망향제'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실향민들은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가슴 아픈 마음과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두고 온 조부모와 부모 형제를 위해 망향제를 지냈다.

망향제 후 6·25전쟁에서 쓰였던 탄피와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모은 탄피로 만든 '세계 평화의 종'도 관람했다.

시흥시협의회는 이북5도민 사회의 구심점으로 화합 단결의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조국 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가 되어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해가기 위해 망향제를 열었다고 전했다.

강원 태백시협의회

통일 기원 북한 음식 체험 행사 열어

강원 태백시협의회(회장 신원철)는 10월 1일 태백제 행사의 일원으로 '통일 기원 북한 음식 체험 행사와 전시 행사'를 개최했다.

제35회 태백제를 기념해 개최된 북한 음식 체험장에선 펑펑이떡이라고도 불리는 속도전떡과 인조고기밥, 두부밥 시식 행사와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함경집'의 북한 음식 5가지를 전시하고 홍보했다. 또한 전자제품과 술 담배, 신발 등 200여 점의 북한 물품 전시장도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큰 모았다.

샌프란시스코협의회

통일 아카데미 강연 개최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0월 11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에서 자문위원과 지역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초청해 '최근 북한 정세 평가 및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신 원장은 "북한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의 생명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을 가지고 제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시협의회

양주의 통일 운동은 서남아로 뻗어간다

서남아협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서남아 각국을 순회하며 한글학교 도서 기증사업을 진행해온 양주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돕기에도 가족, 친지처럼 적극 나서고 있다.

2015년 10월 미얀마 한글학교 준공식 기금을 전달한 홍순평 협의회장(가운데). 양주시협의회는 2010년부터 서남아협의회 각 지회를 방문하며 도서 기증을 해왔다. 2015년 라오스 한글학교 도서기증 모습(왼쪽 사진).

경기 양주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다. 최근 20만 명을 넘긴 정도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 양주시협의회는 행정구역 안의 주민만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다. 양주시협의회는 2000년 중국 동포들에게 헌 옷과 5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곳곳의 동포를 돕는 사업을 꾸준하고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중국과는 2004~2007년 송아지 기증사업을 전개했으나 공안 문제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 사무처를 통해 국내 협의회와 교류를 원하는 서남아협의회와 연결되었다. 두 협의회는 서로 긴밀히 연락해 관계를 조율하다 서남아협의회가 자문위원 연수를 위해 방문한 2010년 자매결연을 했다.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적극적 교류를 위해 우리 쪽에서 '재외동포 자녀 모국어 도서 기증'이라는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죠. 이후 매년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서남아협의회의 각 지회를 방문해 한글학교와 한국어학교에 도서기금을 전달하고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용품을 전달하는 등 한국과 통일을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도서 기증사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홍순평 양주시협의회장은 "처음엔 큰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교류사업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을 돕는다는 '보람'의 힘은 컸다. 행사를 통해 처음 만난 서남아협의회 관계자로부터 "양주시협의회가 보내준 기금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살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는 더 힘껏 돕겠다는 결의가 솟아올랐다.

양주시협의회는 서남아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방한하면 안보 현장 답사와 병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왼쪽).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백일장 대회도 매년 열어왔다.

그런 힘이 이 사업을 8년째 지속하게 했고, 지난 2015년에는 미얀마 한글학교 준공식에 참석해 5000달러의 기금을 전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이 탈북 가정의 육아 발벗고 나서

양주시협의회의 사업이 해외로만 향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힘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 돕기. 양주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등록인원 60여 명에 실제 거주자는 40여 명을 헤아린다.

협의회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탐방' 행사를 열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부지역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남해 등지의 유명 유적지들을 1박 2일간 찾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과 정을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가정사'도 꼼꼼히 챙긴다. 2015년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두 쌍에게 웨딩드레스 등을 지원해 서울시 강남구협의회가 진행한 합동결혼식에서 혼례를 올리게 했다. 2016년 4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유선숙 행정실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협의회의 손길에 경계심도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협의회 간사님이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탈북 여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문위원들이 달려가 아이를 돌봐주는 등 마음으로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는 협의회 관계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언니, 동생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양주시협의회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글짓기 행사와 중·고교생 대상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매년 진행한다. 관내의 덕계고등학교 통일동아리를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등 차세대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주시협의회의의 중심에는 "나의 세대에서 어렵다면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 통일·안보의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홍순평 회장이 있다. 홍 회장은 동양 충효사상 강사로 후학을 가르치며 양주문화원 이사와 양주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오다 2009년 14기에 양주시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4기 연속 협의회장직을 연임했다. 양주시협의회를 이끌어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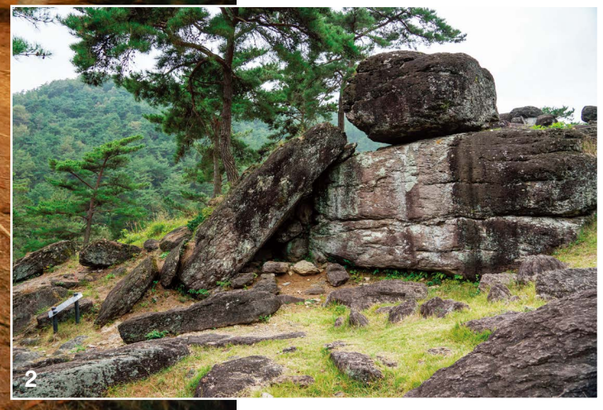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접전지인 양주에서 전쟁둥이로 태어났지요.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 자라며 분단과 남북 대결의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하다 보니 민주적 통일에 대한 신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연스레 민주평통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민주평통이 추구하는 바가 제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신념과 신명으로 일하겠습니다."

홍 협의회장의 남다른 신념과 각오에 양주시협의회가 펼칠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주목하고 싶어진다. NUAC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재를 시작으로 모두 12점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유산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고창·화순·강화 청동기 고인돌 답사 여행

청동기 시대 속으로



1 고창 고인돌박물관의 디오라마.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했다.
2 화순 고인돌 유적 중 하나인 감태바위. 잘라낸 덮개돌이 갓처럼 놓여 있다.

| 양영훈 여행작가 |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다. 전 세계에 7만여 기쯤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우리나라에만 4만여 기가 있다. 화강암 바위산이 많아서 고인돌 축조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기 쉽고, 수백 명의 장정들을 동원해 고인돌을 세울 만큼 강력한 지배력과 경제력을 갖춘 부족국가가 일찍이 존재했던 덕택이다. 전국에 분포된 고인돌 군락 중에서도 밀집도가 높고 원형이 잘 보전된 전북 고창(447기)과 전남 화순(596기), 인천 강화도(70기)의 고인돌 군락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

괸돌, 또는 지석(支石)으로도 불리는 고인돌은 고대 부족국가 지배층의 무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의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졌다.

고인돌은 평지나 땅속에 돌로 만든 널방(무덤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커다란 돌을 덮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고인돌은 하나의 널방에 하나의 덮개돌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외형에서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평지에 높은 받침돌로 널방을 만든 '탁자식'은 북쪽 지방에 많이 분포돼 있다. 그래서 흔히 '북방식'이라 불린다. 반면에 낮은 바둑판 같은 받침돌이나 땅을 파서 만든 널방 위에 덮개돌을 올린 '덮개식'은 남쪽 지방에 흔해 '남방식' 고인돌이라 부른다.

전북 고창군 일대에는 무려 2000여 기의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 그 중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일대의 447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랐다. 남쪽 지방답게 바둑판식, 덮개식 같은 남방식 고인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형적인 북방식 고인돌도 있다. 도산리의 탁자식 고인돌은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의 축소형처럼 형

1 고창읍 죽림리 일대의 고인돌 유적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모든 종류의 고인돌이 다 있다.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생긴 것으로 꼽히는 강화 부근리 고인돌.

3 강화 부근리에 복원해놓은 청동기시대의 움집.

4 화순 고인돌 중 하나인 핑매바위. 바로 위쪽에 각시바위 채석장이 있다.

태가 완벽해서 고창 고인돌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가 뒤뜰의 장독대 옆에 있어서 '장독대 고인돌'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화순

전남 화순군의 고인돌 유적은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대에 596기가 밀집해 있다. 채석장도 4곳이나 발견되었다. 옛날에 보성과 나주를 잇는 보검재(보성재·188.5m)를 따라가면 군데군데 형성된 고인돌 무리가 눈에 띈다. 대부분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 산자락에 자리한 덕택에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 농경지에 자리 잡은 고창의 유적보다 훨씬 더 원형이 또렷하다.

화순 고인돌 유적의 커다란 고인돌 중에는 주민들에게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다. 옛날에 이 고개를 넘어가던 원님이 잠시 앉아 쉬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관청바위, 달처럼 동그랗게 생긴 달바위가 대표적이다. 이곳의 고인돌 유적이 목포대 이영문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은 1995년의 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던 추억 속의 장소였다.

화순의 고인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고인돌은 핑매바위이다. 길이 7m, 높이 4m에 이르는 덮개돌의 무게만 200톤이 넘는 초대형이다. 이 고인돌은 인근 운주사의 천불천탑 전설과도 관련돼 있다. 새벽 닭이 홰를 치기 전까지 운주골에 천 개의 탑을 완성하기 위해 치마폭에 돌을 담아 가던 마고할미가 돌 하나를 흘렸는데, 그 돌이 바로 이 핑매바위라는 것이다. '핑매'는 돌팔매를 뜻하는 사투리다. 이 바위가 선사시대 유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어느 조상은 정면에 '여흥민씨세장산(世葬山)'이라는 한자를 깊게 새겼다. 바위 위쪽의 산등성이에는 각시바위 채석장도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감태바위이다. 수백 기의 크고 작은 고인돌이 빼곡하게 밀집한 산비탈의 맨 위쪽에 감태바위가 있다. '감태'는 갓을 뜻한다. 이 일대 고인돌의 채석장이었던 감태바위의 위와 옆에 갓처럼 생긴 덮개돌이 얹혀 있거나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덮개돌을 떼어 내려고 바위에 판 구멍도 남아 있다. 이 구멍에 나무 쐐기를 박은 뒤 물을 부으면 천천히 팽창한 나무에 의해 바위가 갈라진다.

화순 고인돌 유적의 대신리 쪽 입구에는 '고인돌 발굴지 보호각'이 있다. 고인돌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이다. 진짜 고인돌의 덮개를 들어내고 그 아래의 널방을 원형 그대로 보여준다. 보호각 밖에는 발굴작업을 마친 뒤에 다시 원형대로 복원된 고인돌들이 놓여 있다.

강화

우리나라의 고인돌을 대표하는 부근리 고인돌이 바로 강화도에 있다. 높이 2.6m의 굄돌 2개가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의 화강암 덮개돌을 떠받치는 형태의 탁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무게만도 53톤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며 잘 생긴 고인돌로 손꼽힌다.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근리 일대의 나머지 고인돌 8기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부근리를 찾는 답사 여행객들이나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의 십중팔구는 이 고인돌만 보고 발길을 되돌린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라고도 불리는 이 고인돌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의 형태, 용도, 널방의 구조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제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화도에는 부근리 이외의 지역에도 고인돌 유적이 여러 곳에 산재한다. 총 160여 기의 고인돌이 고려산과 별립산 주위에 흩어져 있다. 그중 5개의 군락과 3개의 단독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우리 땅 곳곳에 흔한 바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인돌을 찾아가는 답사여행은 일반적인 관광과는 달리 무료하고 지루하다.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상상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거대한 돌을 자르고 옮기고 세웠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함성을 듣는, 독특한 여행의 추억을 남긴다. NUAC

여행 정보

탐방 안내

고창 : 고인돌 유적 안으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5개 탐방 코스의 길이가 1.8km에 불과해서 찬찬히 걸어서 둘러보기에 좋다. 채석장 유적을 포함해 5개 코스를 차례로 경유하는 탐방열차를 이용해도 된다. 고창고인돌박물관(063-560-8666)

화순 : 자동차를 타고 약 5km의 보검재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둘러보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비포장도로이지만 승용차도 문제없이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노면이 좋다. 대신리발굴지(061-379-3907)

강화 : 부근리 고인돌 옆에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이 있다. 그곳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약 20분이 소요되는 탐방로를 걸으면 부근리 일대의 고인돌을 거의 다 만날 수 있다. 강화역사박물관(032-930-7084)

숙식

고창 :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의 고창읍내에 위치한 동방호텔(063-563-7070), 뉴프린스관광모텔(063-563-4200), 모양성모텔(063-561-5633) 등의 숙박업소와 조양식당(한정식, 063-564-2026), 정통옛날쌈밥(쌈밥, 063-564-3618), 미향(돌솥밥, 063-564-8762) 등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화순 : 고인돌 유적 부근에는 고인돌민박(061-372-7612), 흙사랑휠(061-371-5111) 등 민박집만 있다. 효산리에서 10여 분 거리의 도곡온천관광지에 도곡온천관광호텔(061-371-5111)을 비롯한 숙박업소가 많다. 고인돌 유적과 가까운 능주면 소재지에서는 능주삼거리식당(족발과 국밥, 061-372-1376), 해산물품은닭(해물요리, 061-373-2112) 등이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 : 부근리 고인돌 부근에 장보고한옥펜션(010-7155-3585), 힐링팜스테이(032-933-1336), 하늘펜션(032-933-0124) 등이 있다.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의 강화읍내에 우리옥(백반, 032-934-2427), 왕자정(묵밥, 032-933-7807), 푸른솔가든(돼지화로구이, 032-933-1555) 등의 맛집이 있다.

우리도 비대칭으로 가자

김영수
—
서강대 정외과 교수
—
서강대 정치학 박사. 서강대 부총장,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과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올해는 북핵으로 시작해 북핵으로 끝나는 양상이다. 연거푸 핵실험을 감행한 북의 다음 수가 뭔가를 예측하다 일 년이 후딱 지나고 있다. 내년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암울한 예감조차 든다. 이 모든 게 북핵이라는 비대칭전력 때문이다.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깨버린 북한의 핵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엉망이 돼버렸다. 이걸 막고자 결행한 사드 문제로 우린 남남갈등과 지역갈등을 겪고 있다. 잘나가던 한중관계도 도루묵이 되면서 '태양의 후예'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력을 극대화하는 신무기를 이미 확보한 것 같은 군사력 인플레 심리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겐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한가. 대북 억제력 확보, 이게 급선무다.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북이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억제력을 갖추지 않고는 그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비대칭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폐쇄성을 체제유지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북한 체제 안에 새 소식을 들여 넣어 '알면 바뀐다'는 명제가 북한 사회에서 먹혀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습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 북한 당국의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되고 있는지를, 대북 제재가 북한 체제를 얼마나 강하게 옥죄고 있는지를 전해야 한다.

비대칭전력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기존 인식을 과감히 깨고 새 소식을 전하는 방식과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전단지는 단골 탈북단체만 뿌릴 게 아니다. 신문사들은 2500만 미래 독자들에게 바깥소식을 요일별로 배달하자. 상봉도 못 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의 편지를 전단으로 날리자. 왜 북을 비판하는 전단만 뿌릴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진정한 통일 염원과 절절한 상봉의 맘을 전달하는 전단은 뿌리면 안 되는가.

대북방송 시간도 늘리고 출력도 키우자. 하루 서너 시간, 그것도 다른 나라 주파수를 빌려 간간이 이어가는 방식을 집어치우고, 종일방송 체계로 '한국의 소리'를 떳떳하게 보내자. 북을 탈출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얘기를 TV와 라디오로 전파해 남쪽 삶을 동경하게 만들자. 한국 돈 5만 원짜리 지폐가 북한 간부들의 저축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화폐의 경쟁력도 알려주자.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도 알리자. 북한에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도록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전해주자.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려주자. 장애를 가졌다고 내쳐지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깨우쳐주자. 10년에서 13년 하는 장기의무복무가 절대 의무가 아님도 알려주고, 성분과 토대가 나쁘다고 멸시와 학대를 받는 체제 작동원리가 얼마나 비정상인지도 일깨워주자.

이런 비대칭전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 아껴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고려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탓이다. 그러나 이제는 써야 할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확성기 방송 중단에 모든 걸 걸려고 하고, 전단지만 뿌리지 않으면 대화하겠다는 북한 태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우리의 비대칭전력으로 북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을 무력화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실행에 들어갈 때가 왔다. NUAC

통·일·퀴·즈

온 가족이 도전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통일골든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지면에서 열리는 '통일골든벨'을 통해 온 가족이 우리 역사와 통일에 관한 시사상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01 올해는 독일 통일 26주년이다.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되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유서 깊은 유적은?
①브란덴부르크 문 ②개선문 ③웨스트민스터 사원 ④판테온

02 요즘 북한에서는 다양한 장마당이 열리고 있다. 장마당은 성격과 특색에 따라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다음 중 배급제 붕괴 이후 생겨난 장마당을 가리키지 않는 이름은?
①종합시장 ②골목장 ③메뚜기장 ④새벽장

03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작전인 KMPR를 수행할 무기로 10월부터 독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500km 비행이 가능해 대전에서 평양의 주석궁을 격파할 수 있다.
①슬램-ER ②팝아이 ③토마호크 ④타우러스

04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한일 간 협정은? 2012년에 맺으려 했다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연기된 바 있다.
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②한일 어업협정
③한일 비자면제협정 ④한일 투자협정

05 8월 29일 불어 닥친 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빚어진 호우로 큰 수재를 본 곳은? 강물이 불어나자 북한 당국은 예고 없이 새벽에 수문을 열어 더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게 했다.
①두만강 중·하류의 함북지역
②평양을 비롯한 대동강 하류
③청진 지역
④압록강 하류의 신의주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

1 ②류성룡 **2** ①태영호 **3** ①공공외교 **4** ④동맹의 딜레마
5 ③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자 |

김성우(강원 춘천시) 소은희(부산 금정구) 조연실(서울 중구) 김성준(서울 마포구) 박차오름(서울 서초구) 이복희(울산 중구) 고정호(전남 목포시) 최수정(전남 여수시) 김정현(전북 군산시) 문봉섭(경남 창원시)

위 문제의 답을 11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11월호(제121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골든벨' 또는 '통일퀴즈'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